

## 지역노동시장권별 창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격차 및 일자리 질 비교

안은경\* · 이희연\*\*

### Differentiation of the Startups Jobs and Their Qualities in Local Labour Market Areas in Korea

Eunkyung An\* · Hee Yeon Lee\*\*

**요약 :**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은 여러 국가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고임금, 상용 일자리보다는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격차를 일자리 양과 질적 측면에서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노동 수급률과 최소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설정된 121 지역노동시장권(LLMAs)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용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121개 지역노동시장권을 3 그룹(광역-중소-농어촌)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 특성이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고임금 일자리들은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주로 창출되는 반면에 상용 일자리는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창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수준과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의 질이 지역경제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인 반면에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 양이 지역경제 수준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성장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일자리 창출, 지역노동시장권, 일자리 양, 일자리 질, 생산성

**Abstract :** The job creation has been the most pressing issue after financial crisis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Various policies for creating jobs have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revitalize regional economy in Korea. It has been known that the jobs have been created more in low-wage and part-time work than high-wage and full-time 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tiation of startups job in local labor market areas(LLMAs) in terms of job quantity as well as job quality. As the spatial unit, 121 local labor market areas which were delineated based on self-containment rate(demand and supply side of labor market) and numbers of resident workers are used. Also due to difference of the size of employment, LLMAs are classified into 3 groups: large, Medium, small LLMAs.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job creation are varied among 3 groups in terms o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Highly waged and highly value-added jobs have been created more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Graduate Student,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교수(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hyn@snu.ac.kr)

in large LLMAs, but full-time jobs created more in small LLMAs. Secondly, the job creation of LLMAs is somewhat weakly correlated to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While the quality of jobs is correlated to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in Medium LLMAs, the quantity of jobs i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in small LLMA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give some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the effective policy to create jobs related to regional economy, indicating that differentiated strategies for 3 groups of LLMAs is critically important.

**Key Words** : job creation, Local Labor Market Areas (LLMAs), quantity of job, quality of job, productivity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4~5%를 유지하였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2년에는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크게 감소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고용의 양적 증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보면 고임금직이나 상용직보다 저임금직이나 고용안정성이 낮은 임시 및 일용직 등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더 나아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와 비수도권 또는 중소도시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점점 더 차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남철, 2008; 허재완, 2006). 수도권에서는 고차 서비스업이나 고부가가치 경공업이 창업되는데 비해 비수도권에서는 생계형 저차서비스업이나 중공업이 창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역 간 창출되

는 일자리 특성이 차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대상으로한 일률적인 일자리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이 광역시·도 단위나 또는 시·군·구 행정구역별로 일자리 창출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행정구역으로 통근하는 근로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통근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노동시장권역별로 일자리 창출과 창출되는 일자리 질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노동의 수급률과 최소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설정된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격차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창출되는 일자리를 단순히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비교하고, 더 나아가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수준과의 상관성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전국사업체조사』원시데이터이다. 이 자료를 통해 매년 창업하는 사

업체들에 대한 정보(예: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 사업의 종류, 종사자 지위 등)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기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이 적용된 2007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 6년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창업된 사업체 데이터를 누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노동시장권을 분석의 공간단위로 하여, 지역노동시장권별로 6년 동안 창출된 일자리를 양(量)과 질(質)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다.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일자리의 양은 해당지역의 고용기회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창출된 일자리가 상용직인지 또는 임시, 일용직인가는 종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창출된 일자리가 고부가가치 일자리인지 또는 저부가가치 일자리인가에 따라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창출되는 일자리 양보다는 오히려 일자리 질이 훨씬 더 중요함을 말해준다.

6년이라는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주어진 기간 동안 소멸되는 일자리를 고려하여 순(net) 일자리 창출을 분석하여야 한다.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는 취업자 수는 알 수 있으나, 창업에 의한 신규 일자리는 알 수 없다. 또한 사업체 기초조사자료의 경우 창업 기업은 알 수 있으나, 폐업 기업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소멸되는 일자리를 파악할 수 없다. 한편 고용보험 자료를 이용하면 소멸되는 일자리를 알 수 있으나, 이 자료의 경우 창출되는 일자리 질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 기초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할 창출된 일자리는 순 일자리가 아니라 매년 창업되는 일자리를 누적한 수치이다.

## 2.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1) 창업이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가설은 Schumpeter(1942)의 '창조적 파괴' 개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경제성장의 추동력을 밝히기 위하여 혁신적 기업이 정신을 강조하였다. 그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란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가의 도전정신으로 인해 기존 제품, 기존의 생산과정 및 시장관행과 구조 등이 파괴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혁신적인 기업가들은 새로운 사업기회에 도전하며, 생산성이 낮은 기존 기업을 대체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추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생 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하면서 창업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이루어진 실증연구들의 경우 창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가설이 입증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창업이 고용 성장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장기적인 시차를 두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Audretsch & Fritsch, 2002; v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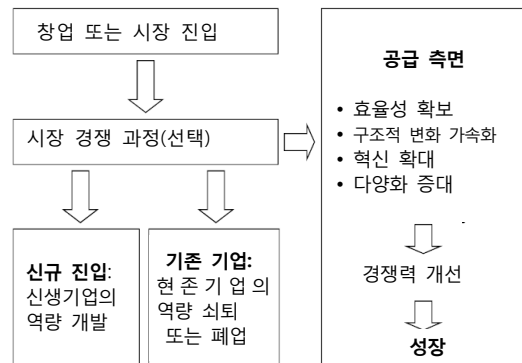


그림 1. 신생 기업의 진입에 따른 시장경쟁 과정  
출처: Fritsch & Muller (2004) p.962.

Stel & Storey, 2004; van Stel *et al.*, 2005). 특히, 신생 기업이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기적, 직접적 영향보다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Fritsch, 2008). 신생 기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보면 그림 1과 같다.

이 모델은 창업이 고용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단계별로 직접효과(I) → 구축효과(II) → 공급측면 효과(III)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신생 기업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단기적, 즉각적으로 고용증가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직접효과(direct effect)라고 한다(I 단계). 그러나 기업 간 치열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신생 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시장 경쟁력이 약한 기존 기업이 쇠퇴하거나 기업이 폐쇄되는데, 이를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한다(II 단계). 그러나 장기적인 시점에서 보면 신생 기업이든 기존 기업이든 간에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이 개선되어 고용증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공급 측면의 효과(supply-side effects)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III 단계). 예를 들면 기업들은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거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혁신을 증대시키며, 보다 더 다양화 전략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게 된다. 이렇게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시장경쟁이 심화될수록 궁극적으로 지역성정을 가져오게 되어 창업은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창업이 고용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신생 기업이 고용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체한 총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신생 기업의 직접 효과는 시장에 진입할 당시가 가장 크다. 그러나 창업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1년 뒤 점차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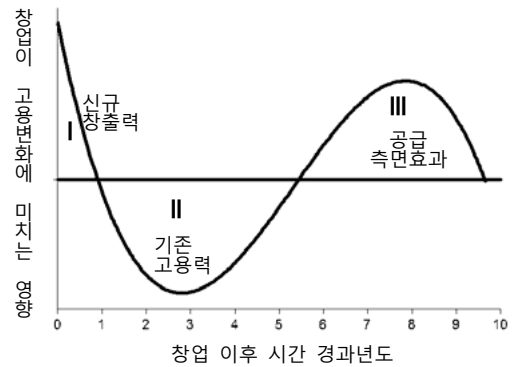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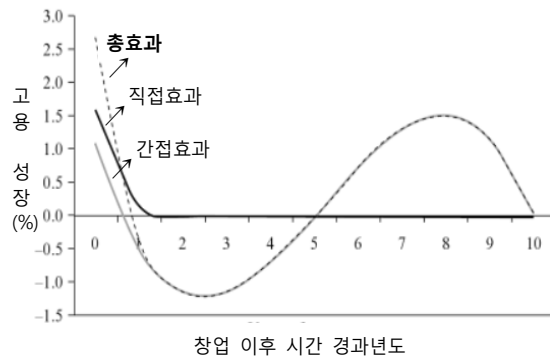


그림 2. 신생 기업이 고용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  
출처: Fritsch, M. (2008) p.8.

영향력을 급속히 줄어들게 되며, 2년 이후부터는 미미하지만 부정적 영향을 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접효과가 훨씬 간접효과가 더 크고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그림 2 참조).

이와 같이 창업이 고용 성장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공급측면의 효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일 기업 간 경쟁이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지 않는다면 신생 기업의 공급측면 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모든 신생 기업이 지역성장에 동일한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며, 신생 기업이 기존 기업에 강한 도전력을 가진 혁신기업일수록 지역성장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며, 또한 신생 기업 진입에 따른 기존 기업의 반응이 보다 생산적이고 혁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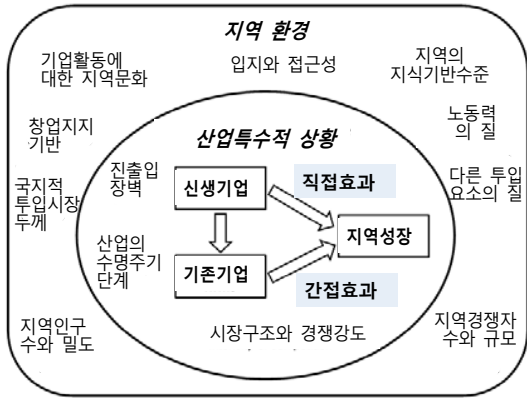


그림 3. 신생 기업이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발하는 산업특수성과 지역환경 요인들

출처: Fritsch, M. (2014), p.6.

일수록 그만큼 지역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Dejardin & Fritsch, 2011).

한편 신생 기업이 고용 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신생 기업의 업종 특수성과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환경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그림 3 참조). 특히 신생 기업이 해당 업종의 수명주기의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초기 vs 성숙기), 또는 기존 기업과의 경쟁 구도가 어느 정도 치열한가 등 업종 특수성에 따라 상당히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 더 나아가 기업이 입지한 지역환경 요소들(구매력, 지식기반, 문화, 제도 등)에 따라서도 그 영향력이 차별화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신생 기업이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석 틀 속에서 시차를 두고 정확히 추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 하에서 창업이 고용 증가 및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Reynolds (1994)는 처음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창업이 고용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뒤를 이어 영국,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연구가 수행되었다. 영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van Stel

& Storey(2004)의 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창업과 고용 성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1990년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의 경우 이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van Stel et al. (2005) 연구에서는 선진국에서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재(2005)는 28개국을 사례로 하여 분석한 결과 창업활동이 보다 활발한 국가일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2008년 *Small Business Economics* 특별 호(vol.30, no.1)에서는 그동안 수행된 실증연구들을 고찰하고, 6개 국가와 21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Arauzo-Carod et al.은 스페인의 17개 지역, Baptista, Escária & Madrugo는 포르투갈의 30개 지역, Fritsch & Muelle는 독일의 74개 지역, Mueller, van Stel & Storey는 영국의 59개 지역, van Stel & Suddle는 네덜란드의 40개 지역, 그리고 Careee & Thurik는 OECD 2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창업이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지체 시간(time-lag)을 6~10년을 두고 추정하였다. 이렇게 실증분석한 결과를 보면 창업에 따른 고용 성장은 대체적으로 'S'곡선을 나타내며, 일부 'U' 곡선도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이 고용 성장 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장기적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특히 Fritsch and Mueller(2008)는 독일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창업이 지역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창업에 따른 간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집적지역에서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혼잡지역,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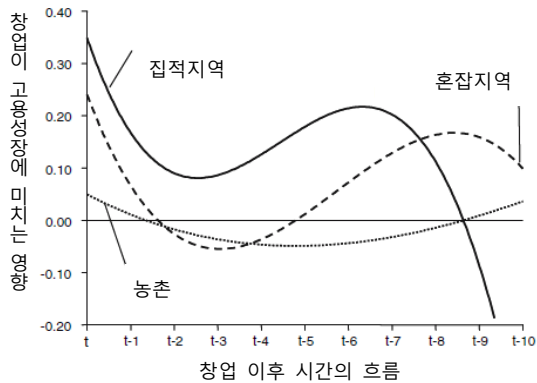


그림 4. 창업이 고용성장에 미치는 차별적 특성

농촌에서 고용 증가가 가장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창업이 고용 증가 및 지역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기까지 상당한 지체시간이 걸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림 4 참조).

한편 2011년 *Small Business Economics* 특별호(vol.36, no.4)에서는 창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요인들에 대해 초점을 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Fritsch & Schroeter는 독일을 사례로, Bosma, Stam & Schutjens는 네델란드를, Baptista & Preto는 포르투갈을, Dejardin는 벨기에를, Andersson & Noseleit은 스웨덴을 사례로 하였다. 특히 이들 연구는 창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추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신생기업 자체의 특성과 지역환경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공통된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신생기업이 지식집약적이고 혁신기업일수록 창업활동이 지역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 연구의 경우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의 지역간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문남철, 2009; 양현봉 외, 2009; 윤운구·고영우, 2009), 창업이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지역별(시도별, 관역권별)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소멸되는 일자리 특성(산업 및 업종 특성)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창업활동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원규(2012)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창업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한 모델을 사용하여 2003~09년 동안 17개 산업별로 창업률의 증가가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률의 증가는 시차를 가지면서 경제성장 및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이 성장 및 고용증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신생기업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혁신적 신생기업은 창업에 따른 간접 효과인 공급 측면의 효과를 더욱 크게 유발함으로써 창업의 경제성장 및 고용증가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창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지역적 차원에서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고용창출과 지역경쟁력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고용성장이 지역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변필성 외, 2005), 산업구조의 다양성 변화가 지역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김대중 외, 2014). 그 결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책은 지역의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을 기대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하여 취업유발효과가 큰 기업을 선별하여 유치하여야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윤갑식, 2011).

## 2) 일자리 질과 관련된 연구

일자리 질과 관련한 연구들을 보면 주로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good job and bad job)’, ‘괜찮은 일(decent work)’ 등의 용어 사용을 통해 ‘노동의 질(quality in work)’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은 국제노동기구(ILO) 제 87회 국제노동회의의 사무총장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이다(ILO, 1999). 이 개념은 ‘자유롭고 공평하며 안전하고 인간적 품위가 존중되는 조건 속에서 남녀 모두 종사하는 생산적인 일’을 지칭한다. ‘decent’의 의미는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경제성장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한 일자리(고용기회)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요소들, 예를 들면 일자리의 안정성, 적절한 소득과 생산적 노동, 적절한 근로시간, 안전한 작업 환경, 고용 상의 공정한 처우, 일과 가정의 양립, 사회적 대화와 작업장 노사관계, 사회보장 영역에 다양한 변수들을 내포하고 있다(Anker *et al.*, 2003; Bonnet *et al.*, 2003).

국내에서도 ‘괜찮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일자리’로 해석하고, 적절한 임금, 고용의 안정성 및 지속성, 사회보장의 세 가지 요인을 ‘괜찮은 일자리’라고 정의하고 있다(최옥금, 2006). 또한 이성균(2008)은 ‘괜찮은 일자리’를 평가하는 지표로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동, 고용의 공평한 처우, 노동의 안정성과 혜택,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한 일자리라고 정의하면서, 중위임금의 50%이상, 퇴직금·상여금·시간외 수당·유급휴일 가운데 2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경우, 정규직·고용주·전일제 근로자,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되는 경우를 ‘괜찮은 일자리’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방하남·이상호(2006)는 좋은 일자리 개념을 구성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노용환·신종각(2007)은 ‘고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고용 기회, 고용 안정성, 소득 안정성, 사회적 보호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11개 변수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을 통해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지수를 산출하여, 시계열적 비교를 하였다. 또한 남춘호(2011)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의 질 지수를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2001~08년 동안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송영남(2010)은 좋은 일자리 결정요인과 6대 권역 간 좋은 일자리가 어떻게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가를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이종호·김진수(2012)는 산업단지의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단지 초기에는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 볼 때 일시적인 불안정한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단지 조성에 따라 특히 제조업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 창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선행연구들의 경우 일자리 질에 대한 개념과 일자리 질을 측정하는 방법에 치중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지역노동시장권별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3. 지역노동시장권 설정과 일자리 측정 지표 선정

### 1) 지역노동시장권 설정 방법

‘지역노동시장권(LLMAs: Local Labour Market Areas)은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와 노동력을 구하려는 기업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지리적 범위 또는 기능적 권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Casado-Diaz, 2000). 지역노동시장권 설정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의 경우 지역노동시장권(TTWAs: Travel to Working Areas) 설정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발전되어오고 있다. TTWAs 방법은 Smart(1974)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TTWA를 설정하기 위해 행정구역별 일자리 비율과 노동 공급자급률을 통해 고용중심지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후 Coombes & Bond(2008)가 이 방법을 보다 정교화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지역노동시장권은 일자리 비율, 노동 수·급자급률, 인구(고용)규모를 고려한 단계적 알고리즘을 통해 권역이 설정된다. 특히 Coombes & Bond(2008)는 지역노동시장권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단일 기준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치 적용을 달리하면서 집계된 기초구역단위들을 반복적으로 해체-재집계 과정을 통해 적합한 권역을 선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TTWA 설정의 첫 번째 단계는 노동자급률(self-containment rate)과 고용 거주자(no. of employed residents) 기준치를 적용하여 잠재적 중심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초기 연구에서는 일자리 비율과 노동자급률 상위 20%에 해당하는 도시들을 잠재적 중심지를 선정하였으나, Coombes & Bond(2008)의 수정된 방법에서는 임의성을 배제하여 모든 도시들이 선정 후보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T_{ij}$ :  $i$ 지역에서  $j$ 지역으로의 통근자수

$\sum_{j=1}^n T_{ij}$ :  $i$ 지역의 총고용자수(내부통근자  $T_{ii}$  포함)

$\sum_{j=1}^n T_{ji}$ :  $i$ 지역의 총일자리수(내부일자리  $T_{ii}$  포함)

$i$ 지역의 노동 공급자급률 =  $T_{ii} / \sum_{j=1}^n T_{ij}$

$i$ 지역의 노동 수요자급률 =  $T_{ii} / \sum_{j=1}^n T_{ji}$

$i$ 지역의 일자리 비율 =  $\sum_{j=1}^n T_{ji} / \sum_{j=1}^n T_{ij}$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잠재적 중심지들 간의 관

계와 주변지역들을 고려한다. 대도시 주변 도시들의 경우 독립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하더라도 인접한 잠재적 중심지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 중심지 내부로의 유입통근에 대한 순위를 산출하고, 만약 중심지  $j$ 가 다른 중심지  $i$ 와 높은 통근강도(the strength of commuting flows)를 갖고 있다면 이 두 도시는 병합된다(중심지  $i$ 와  $j$ 는 통근강도에 따라 병합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통근강도가 가장 높은 두 도시부터 통합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고용규모와 노동자급률 간의 상쇄(trade-off)관계를 고려하면서 잠재적 중심지를 확대·추출하여 시범 통근권(proto TTWAs)을 구축한다. 일반적으로 인구규모가 큰 대도시들의 노동자급률이 낮으며, 외부와의 교류가 적은 농촌이나 소도시들의 노동자급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인구규모에 따른 노동자급률 기준을 완화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Casado-Diaz(2000)는 고용규모와 노동자급률 간의 상쇄관계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노동자급률과 고용규모의 기준치를 변화시킬 경우 그에 따라 설정되는 TTWA의 민감도를 파악하여 적합한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종 지역노동시장권은 노동자급률 구간( $\beta_1 \sim \beta_2$ )과 고용규모( $\beta_3 \sim \beta_4$ )에 따라 결정된다(그림 5 참조).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잠재적 중심지가 결정되면 주변지역들은 해당 중심지와의 통근강도에 따라서 배타적 지역노동시장권역으로 할당된다.

한편 국내에서도 TTWA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노동시장권을 설정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호(2008)는 인구센서스 2% 통근자료를 이용하여 최소 노동자급률 기준(60~65%, 70~75%, 80~85%)과 인구 기준(1만, 5만, 10만명)을 달리하는 경우 지역노동시장권역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70~75%자급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995년 146개, 2000년 135개, 2005년 122개 지역노동시장권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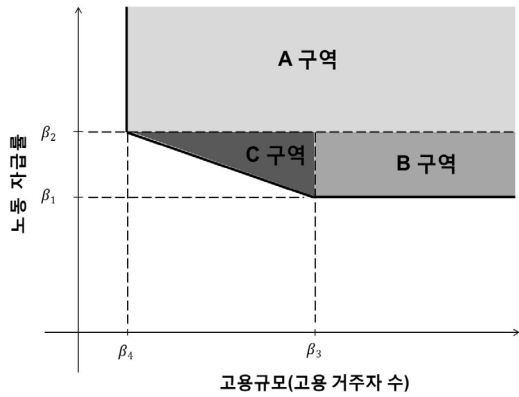


그림 5. 지역노동시장권 설정에서 기준치들 간의 상쇄관계  
출처: 이상호(2008), p. 152.

로 설정되었다. 박시내(2009)는 지역별 고용조사(2008)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자급률 75%를 적용할 경우 124개, 85%에서 100개, 그리고 90~95%에서는 33개 지역노동시장권으로 설정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어떤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2010)은 공간단위를 달리하는 경우 지역노동시장권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였다. 특히 2005년 인구센서스 10% 표본자료를 사용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분석의 공간단위를 달리하는 경우 지역노동권 설정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비교하였다. 또한 고용규모와 고용자급률을 달리하는 다양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최소 취업자 수 3,500명, 고용자급률 75%를 지역노동권 설정을 위한 적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에서 설정한 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지역노동시장권은 137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노동시장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러나 지역노동시장을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하는지, 또는 광역시도 단위에서 분석하는 가에 따라 그 함의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역노동시장권 설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TTWA 설정방법을 이용하여 인구 5만명 기준 및 노동수급 자급률 70~75% 기준으로 제시한 이상호(2008)의 지역노동시장권 설정 결과<sup>1)</sup>를 토대로 하되, 2012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총 121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을 설정하였다(부록 1 참조).

## 2)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 측정지표 선정

### (1) 일자리 양 측정 지표

일자리 양은 신생 기업에서 창출한 종사자수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기간(예를 들면 5년 또는 10년) 동안 창출된 일자리 양을 측정하는 경우 적절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창업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은 신생 기업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기존 기업의 확장으로 인해서도 창출될 수 있다. 또한 신생 기업도 시장 진입 이후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창업 이후 곧바로 폐쇄될 수도 있으며, 기존 업체도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경우 폐업으로 인해 일자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주어진 시기 동안에 순수하게 증가된 일자리는 창출된 일자리에서 소멸된 일자리를 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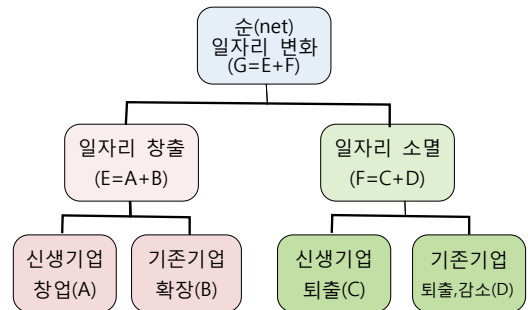


그림 6. 순(net) 일자리 변화량 산출

그러나 매년 조사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자료를 통해 매년 창업체수와 그에 따른 종업원수를 알 수 있으나, 기존 사업체에서 늘어난 종업원수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창업한 기업의 생존 여부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순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기업의 폐쇄에 따른 일자리 소멸 자료는 국세청이나 고용보험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 자료의 경우 창업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의 세부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없으며, 국세청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다.

이러한 제약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출된 일자리의 양을 나타내는 고용기회를 측정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률 지표를 선정하였다. 먼저 각 지역노동시장권별로 2007~12년 동안 신생 기업에서 창출된 종사자수를 누적하였다. 이렇게 각 지역노동시장권별 누적된 창업 종사자수를 2012년 각 지역노동시장권의 총 종사자수로 나누어서 일자리 창출률을 측정하였다.

일자리 창출률=

$$\frac{2007\sim 12\text{년 누적 신생기업의 종사자수}}{2012\text{년 총 종사자수}}$$

## (2) 일자리 질 측정 지표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질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고용 안정성’, ‘임금 보상’, ‘생산성’ 지표를 선정하였다.

### ① 고용 안정성

고용 안정성은 현재의 고용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고용이 불안정한 형태의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일자리 질을 평가하는데 고용안정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 안정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고용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임시직 비율과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비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노동시장권의 고용 안정성은 창출된 임금 근로자 가운데 상용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고용 안정성=

$$\frac{2007\sim 12\text{년 창업 상용종사자수의 합}}{2007\sim 12\text{년 창출된 임금 근로자수의 합}} \times 100$$

### ② 임금 보상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인 임금수준은 고용안정성과 더불어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평균 일당 급여를 산출하였다. 특히 업종별 임금 보상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월 급여 총액 자료가 아닌 정액 급여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초과근로일수가 많을수록 월 급여 총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12년 4년간 임금(정액 급여/근로일수)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업종별 임금 수준을 토대로 임금 수준 격차가 심한 구간을 번복점으로 삼고 업종별로 임금 수준을 3분위로 구분하였다(부록 2 참조). 그 결과, 고임금 업종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분류된 고임금 산업의 창업 종사자의 수를 각 지역노동시장권의 총 종사자의 수(2012년 기준)로 나눈 값을 임금 보상을 측정하는 지표로 삼았다.

임금 보상=

$$\frac{2007\sim 12\text{년 창업 고임금업종 종사자수의 합}}{2007\sim 12\text{년 창출된 종사자수의 합}} \times 100$$

### ③ 생산성

창출된 일자리의 생산성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 할지라도 그 창출된 일자리의 생산성이 낮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2007~12년 동안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활동 조사의 각 업종별 총 부가가치를 총 종사자수로 나눈 일인당 부가가치금액을 매년 계산하여 평균 값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업종별 생산성 값은 전국적 수치이기 때문에 지역노동시장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일 업종이라도 종사자의 학력, 경력 등에 따라 지역마다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업종별 부가가치 자료를 구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 평균치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된 각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억원 이상을 나타내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산업,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선정하였다(부록 3 참조).

생산성 =

$$\frac{2007\sim 12\text{년 창업 고부가업종 종사자수의 합}}{2007\sim 12\text{년 창출된 종사자수의 합}} \times 100$$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는 세 가지 지표들의 측정값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 지표를 선형 표준화(linear scaling) 방법을 사용하여 0~1 값으로 정규화하였다. 이렇게 표준화된 세 지표를 합성하여 평균한 값을 일자리 질 지수로 산정하였다. 선형 표준화 방법은 다음과 같다.

$$Z_i = \frac{x_i - \text{Min}(x_i)}{\text{Max}(x_i) - \text{Min}(x_i)}$$

## 4.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창출 비교

### 1) 전국 차원의 일자리 양과 질 분석

지난 6년(2007~12년) 동안 전국적으로 볼 때 266만개 사업체가 창업하였고, 그로 인해 825만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창출된 일자리의 양만 보면 지역노동시장권역이 가장 넓은 서울권과 광역대도시권에서 주로 신생 기업이 창업하여 고용 기회가 상당히 늘어났다. 특히 창출된 일자리의 80%가 상위 10% 지역노동시장권에 집중되어 있어 고용기회의 지역적 편차가 매우 심함을 알 수 있다. 서울권은 지난 6년 동안 약 100만 개의 사업체, 343만명의 종사자가 창출되어 전국의 약 40% 일자리가 서울권에서 창출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지역노동시장권역이 넓을수록 당연히 창출된 일자리의 양이 많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의 절대적 규모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률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지난 6년 동안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 35% 수준의 일자리 창출률을 보이는 가운데 통영시가 67%로 가장 높게 나타내고 있다. 서울권을 비롯한 광역대도시권의 일자리 창출률은 45% 내외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이는 대도시권의 경우 절대적인 일자리 수는 많이 창출되었지만, 워낙 지역노동시장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난 6년 동안 일자리의 질을 보면, 상용 일자리 비율이 높아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지역노동시장권은 주로 군부(농촌)로 나타났으며, 군위군이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중에는 울산권이 81.6%로 가장 높고 부산권이 78.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고임금 업종 종사자 비율이 높아 임금보상이 높은 지역노동시장권은 서울권(16.5%)이며, 광주권, 대전권 순으로 주로 대도시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부가가

치 업종 종사자 비율이 높아 생산성이 높게 나타난 지역노동시장권은 경남 고성군, 금산군, 통영권, 거제권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고부가 가치 업종에 속하는 제조업이 특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121개 지역노동시장권 전체를 대상으로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3개 지표들 간에 상관관계를 보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용 안정성과 임금 보상 또는 생산성과의 상관성은 0.4 미만을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이는 일자리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이 서로 다른 차원의 일자리 질 특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일자리 질 지표가 상당히 다양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양과 일자리 질 지수의 평균 값을 기준으로 창출된 일자리 특성에 따라 지역노동시장권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평균 이상으로 1사분면에 속한 지역노동시장권을 보면 서울권을 포함한 광역 지역노동시장권과 인구규모가 비교적 큰 지역노동시장권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의 양 창출은 낮으나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평균 이상으로 2사분면에 속한 지역노동시장권은 대체적으로 전북과 전남에 분포되어 있고, 반대로 일자리의 질보다 일자리의 양이 평균 이상으로 4사분면에 속한 지역노동시장권은 경기도와 강원도에 주로 분포되어있다. 일자리의 양과 일자리의 질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노동시장권은 대부분 군부로 강원도와 경북, 전남의 농·어촌에 분포되어

있다(그림 7 참조).

121개 지역노동시장권 규모가 상당히 차이이며, 산업구조 및 지역 특성으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 격차를 전국적 자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7개 광역시 및 창출된 종사자 수가 15만명 이상인 지역노동시장권을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으로, 중심도시가 시급인 경우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으로, 그리고 나머지 군부들을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은 10개,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은 42개,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은 69개로 분류되었다(표 2 참조).

표 1. 121개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질을 나타내는 3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고용 안정성	임금 보상	생산성
고용안정성	1		
임금보상	.369**	1	
생산성	.297**	-.092	1
일자리 질	.834**	.641**	.560**

\*:  $\alpha=0.10$ , \*\*:  $\alpha=0.05$ 에서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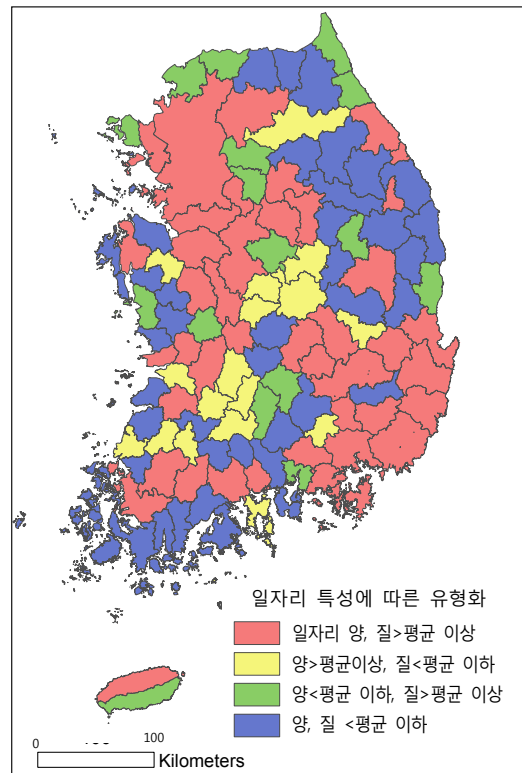


그림 7. 창출된 일자리 특성에 따른 지역노동시장권의 유형화

표 2. 고용규모에 따른 지역노동시장권 분류

구분	지역노동시장권 명
광역 지역노동 시장권(10개)	서울권, 부산권, 대구권, 인천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청주권, 천안아산권, 마산창원권
중소 지역노동 시장권(42개)	평택안성권, 이천권,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동해권, 태백권, 삼척권, 속초권, 충주권, 제천권, 공주권, 보령권, 서산권, 논산계룡권, 당진권, 군산권, 익산권, 정읍권, 남원권, 김제권, 전주완주권, 여수권, 순천권, 광양권, 목포권, 포항권, 경주권, 김천권, 안동권, 구미칠곡권, 영주권, 영천권, 상주권, 문경권, 진주권, 통영권, 사천권, 밀양권, 거제권, 서귀포권, 제주권
농·어촌 지역 노동시장권 (69개)	강화권, 용진권, 여주권, 연천권, 양평권, 홍천권, 횡성권, 영월권, 평창권 정선권, 철원권, 화천권, 양구권, 인제권, 양양권, 보은권, 옥천권, 영동권, 괴산증평권, 단양권, 금산권, 부여권, 서천권, 청양권, 홍성권, 예산군, 태안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권, 임실권, 순창권, 고창권, 부안권, 담양권, 곡성권, 구례권, 고흥권, 보성권, 화순권, 장흥권, 강진권, 해남권, 함평권, 영광권, 장성권, 완도권, 진도권, 신안권, 군위권, 의성권, 청송권, 영양권, 영덕권, 청도권, 성주권, 예천권, 봉화권, 울진권, 울릉권, 의령권, 창녕권, 고성권, 남해권, 하동권, 산청권, 함양권, 거창권, 함천권

2) 광역 지역노동시장권

10개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지난 6년 동안 창출된 일자리를 비교해보면, 일자리 양은 광주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자리의 질은 울산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 참조). 한편 광주권, 부산권, 대전권, 천안아산권은 일자리 질보다

양에서 더 우위를 차지하며, 그 외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의 질에서 더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8 참조).

3) 중소 지역노동시장권

중심도시가 시급 도시인 42개 중소 지역노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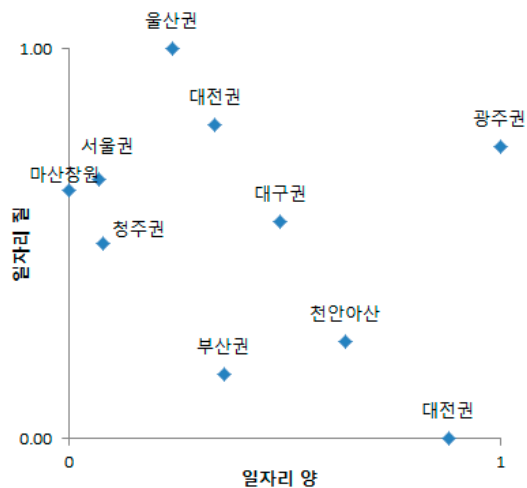


그림 8.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 간의 산포도

표 3.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양과 질

(단위: %)

지역노동 시장권	일자리 양 일자리 창출율	일자리 질			
		지수	상용 비율	고임금 비율	생산 성
서울권	44.2	0.93	79.7	16.5	14.4
부산권	46.4	0.36	78.7	11.5	15.8
대구권	47.4	0.94	79.9	12.5	15.6
인천권	50.4	0.89	79.2	10.5	16.2
대전권	46.3	0.68	80.0	13.6	9.5
광주권	51.3	1.44	79.4	14.8	12.1
울산권	45.5	1.24	81.6	12.0	17.7
청주권	44.3	0.26	79.8	10.5	15.8
천안아산	48.6	0.93	78.6	9.5	28.1
마산창원	43.7	0.32	79.6	10.5	20.1



장권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6년동안 창출된 일자리를 보면 통영권의 일자리 창출률이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일자리 질은 상대적으로 하위에 머물고 있다. 반면에 김제권의 경우 일자리의 양에서는 하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자리의 질에서는 상위에 포함되어 창출된 일자리 양보다 질적인 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주완주권, 거제권, 원주권, 춘천권은 일자리 양과 질 모두 상위에 속해 있다(표 4 참조). 42개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 간의 관계를 산포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비례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사례들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그림 9 참조).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일자리 양과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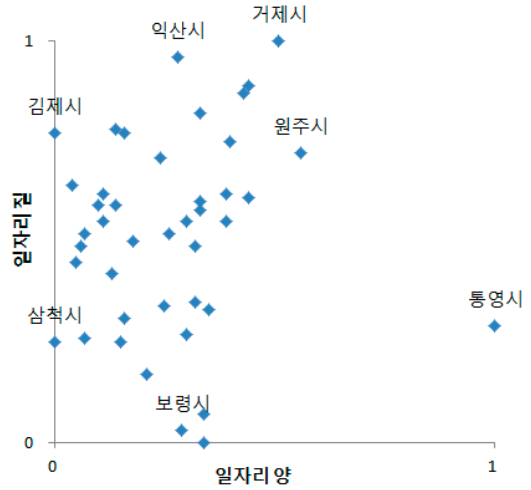


그림 9.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 간의 산포도

표 4.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양과 질 지표 세부

	순위	지역노동시장권	일자리 양	지역노동시장권	일자리 질			
			일자리 창출율		지수	상용 비율	고임금 비율	고부가가치 비율
상위 10 위	1	통영권	66.9	거제권	1.00	78.9	9.6	33.1
	2	원주권	51.8	익산권	0.96	80.2	11.4	15.8
	3	거제권	50.1	전주완주권	0.89	79.0	12.9	10.2
	4	군산권	47.7	순천권	0.87	78.8	13.1	9.1
	5	전주완주권	47.5	진주권	0.82	80.0	11.4	8.6
	6	순천권	47.2	경주권	0.78	80.0	8.1	22.8
	7	춘천권	46.1	김제권	0.77	80.3	8.4	19.4
	8	목포권	45.8	구미칠곡권	0.77	78.9	8.5	25.6
	9	제주권	45.9	춘천권	0.75	77.8	12.7	9.2
	10	제천권	44.4	원주권	0.72	78.9	11.1	9.4
하위 10 위	33	공주권	36.3	김천권	0.31	76.4	6.2	22.3
	34	정읍권	36.1	통영권	0.29	72.7	5.7	41.4
	35	영천권	35.7	논산계룡권	0.27	76.6	7.3	13.2
	36	당진권	34.8	당진권	0.26	75.8	7.9	13.2
	37	상주권	34.8	삼척권	0.25	76.1	8.0	11.1
	38	문경권	34.3	영주권	0.25	76.0	8.6	8.9
	39	남원권	34.0	서귀포권	0.17	77.5	7.1	4.4
	40	여수권	33.9	사천권	0.07	72.6	5.7	28.8
	41	삼척권	32.4	보령권	0.03	75.3	6.7	8.1
	42	김제권	32.4	속초권	0.00	74.1	7.8	7.4

표 5.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질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고용 안정성	임금 보상	생산성	일자리 질	일자리 양
고용안정성	1				
임금보상	.338*	1			
생산성	-.196	-.391*	1		
일자리 질	.750**	.674**	.146	1	
일자리 양	-.353*	.169	.351*	-.078	1

\*:  $\alpha=0.10$ , \*\*:  $\alpha=0.05$ 에서 유의함.

질 지수 간의 상관성을 보면 거의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42개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워낙 이질적이고 산업구조가 다양하며, 특히 고임금 업종이나 생산성이 높은 업종의 창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자리 질을 나타내는 3개 지표들 간의 상관성을 보면 고용 안정성과 임금 보상 간의 상관성은 정(+)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만, 생산성과 임금보상 간의 관계는 부(-)로 나타나고 있다(표 5 참조).

#### 4)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에서 전국 평균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창출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지난 6년 동안 69개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보면 여주권은 일자리의 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일자리 질은 경남 고성권이 가장 높다. 반면에 진안권은 일자리 양은 가장 낮으나,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일자리 창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창출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임을 말해준다. 이외에도 장수권, 의령권, 괴산중평권의 경우 일자리 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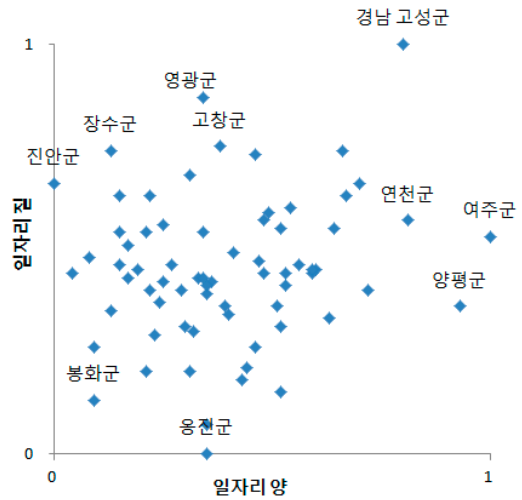


그림 10.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 간의 산포도

한편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일자리 양과 질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관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광역, 중소 지역노동시장권과는 달리 일자리 질을 나타내는 3개 지표들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0.5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7 참조).

### 5. 일자리 창출과 지역성장 관계

지역노동시장권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다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sup>2)</sup>. 또한 지난 6년 동안 신생 기업으로 인해 누적된 창출 일자리의 양과 질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차적인 적용과 함께 지역경제성장률(GRDP 성장률)과 비교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도에는 일부 시·군들의 GRDP 자료가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7~2012년 동안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지

표 6.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양과 질 지표 세부

	순위	지역노동 시장권	일자리 양		일자리 질			
			일자리 창출율	지역노동 시장권	지수	상용 비율	고임금 비율	고부가가치 비율
상위 10위	1	여주권	51.4	경남 고성권	1.00	82.6	4.0	51.1
	2	양평권	48.9	영광권	0.87	77.0	13.3	20.5
	3	연천권	44.7	고창권	0.75	82.3	7.0	15.4
	4	고성권	44.3	장수권	0.74	77.5	11.2	14.6
	5	철원권	41.4	화순권	0.74	80.9	8.8	12.5
	6	금산권	40.9	장성권	0.73	76.8	7.6	30.5
	7	창녕권	39.6	순창권	0.68	80.8	5.9	18.3
	8	화순권	39.4	금산권	0.66	73.1	3.9	50.5
	9	성주권	38.5	진안권	0.66	73.2	13.6	11.5
	10	양양권	38.4	영동권	0.63	79.7	7.9	9.4
하위 10위	60	장흥권	21.2	영월권	0.26	73.3	4.3	8.9
	61	강진권	21.1	울릉권	0.26	74.6	3.1	8.4
	62	고흥권	21.4	부여권	0.21	70.6	5.1	9.1
	63	장수권	20.6	무주권	0.20	74.1	3.4	3.4
	64	청양권	20.5	보성권	0.20	73.3	3.4	6.3
	65	울릉권	19.1	울진권	0.18	69.9	6.0	5.7
	66	봉화권	19.2	남해권	0.15	69.9	5.1	6.5
	67	곡성권	18.8	봉화권	0.13	71.8	2.9	6.3
	68	신안권	17.2	진도권	0.07	67.8	4.8	6.9
	69	진안권	15.9	웅진권	0.00	72.0	1.0	0.8

표 7.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질 지표 들 간의 상관관계

	고용 안정성	임금 보상	생산성	일자 리 질	일자 리 양
고용안정성	1				
임금보상	.034	1			
생산성	.135	-.111*	1		
일자리 질	.696**	.498**	.568**	1	
일자리 양	.136	-.061	.209	.164	1

\*:  $\alpha=0.10$ , \*\*:  $\alpha=0.05$ 에서 유의함.

역경제성장률을 산출할 수 없다. 이러한 자료의 제약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우 단순하지만, 6년 동안 지역노동시장권별 누적적 일자리 창

출이 지역경제 수준과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 가를 단순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역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뿐만 아니라 1인당 부가가치 자료도 이용하였다. 이는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 GRDP 수치가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군구별 부가가치 자료는 2011년에 최초로 실시한 경제총조사<sup>3)</sup>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010년 시군구 집계자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합산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경제총조사 이전까지는 파악될 수 없었던 시군구별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별 부가가치를 지역노동시장권별

로 집계하여 활용하였다.

$$\text{부가가치} = \text{인건비} + \text{임차료} + \text{세금과공과} + \text{감가 대손상각비} + \text{영업이익}$$

이렇게 121개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수준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양과 질 모두 상관계수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일자리의 질 지수만이 지역노동시장권의 부가가치 수준과 통계적으로 보다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자리의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향상이 지역경제성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보면 일자리 양은 지역경제 수준과 부(-)적인 상관성을 보이는 반면에 일자리 질 지수는 정(+)적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전국 일자리 창출의 80% 이상을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이 차지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양은 지역의 부가가치 수준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표본 수(10개)가 워낙 작아서 상관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 질은 지역경제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성을 보여주지만, 일자리의 양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진 않지만 상용 일자리나 고임금, 고부가가치 업종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수록 그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지역경제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일자리 질과 지역경제 수준 간의 상관성이

표 8. 창출된 일자리와 지역경제수준의 상관관계

	구분	일자리 양	일자리 질
부 가 가 치	121개 전체	.195*	.298**
	광역 지역노동시장권	-.327	.474
	중소 지역노동시장권	.067	.448**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	.453**	.275*
G R D P	121개 전체	.211*	.289**
	광역 지역노동시장권	-.359	.501
	중소 지역노동시장권	.063	.345**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	.520**	.235**

\*:  $\alpha=0.10$ , \*\*:  $\alpha=0.05$ 에서 유의함.

유의하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의 양이 지역경제 수준과 훨씬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 창출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일자리의 양적 증가가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해주며, 따라서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는 고용기회 자체를 늘려주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 6. 결론

본 연구는 노동의 수급과 고용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어느 정도 독립성을 지닌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특성을 비교하고, 특히 창출되는 일자리 질을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난 6년 동안 전국에서 창출된 총 일자리의 약 80%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창출되었다. 창출된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고용안정성, 생산성, 임금 보상)에서도 역시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이 우위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고임금의 일자리는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에서 비교적 많이 창출되는 반면에 상용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로 인구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 많이 창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창출된 일자리의 양과 질이 지역경제 수준과 어떠한 상관성을 보이는 가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지역경제 수준과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3개 유형별 지역노동시장권마다 창출되는 일자리 특성과 지역경제 수준 간의 상관성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에서는 일자리의 양보다 일자리의 질이 지역경제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는 일자리의 양이 지역경제 수준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소 규모의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가 창출되어도 임시직 또는 저임금, 저부가가치의 일자리라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일자리 양만을 늘리는 정책보다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 결과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창출되는 일자리 특성이 상당히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노동시장권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투입된 재정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수도 있다. 만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임금이 적은 한시적 일자리나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수단형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아직도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근로형 일자리 및 시간제 일자리 등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창출되는 상용

일자리 비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상용직 일자리 증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 실태를 분석하고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비교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지역의 누적적인 일자리 창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창출뿐만 아니라 소멸되는 일자리까지 고려하여 순 일자리 창출을 측정하여야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정확하게 일자리 창출량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일자리 질을 측정하면서 근로 임금자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자영업이나 농업관련 종사자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째, 단순하게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일자리의 질을 비교하는데 그쳤으며, 왜 해당 지역노동시장권이 일자리 창출이 상위 또는 하위에 속하는가에 대한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정책적 요인들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수준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는데 그쳤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교한 모델을 통해 지역노동시장권에서의 창업이 시차적으로 고용 증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는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

- 1) 2015년 시점에서 지역노동시장권역을 설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으며, 따라서 2010년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지역노동시장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지역노동시장권은 최소 고용규모와 노동수요자급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권역이 상당히 민감하게 달라진다. 본 연구는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노동시장권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



니며, 만일 2010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노동시장권역을 설정하는 경우 설정된 권역에 대한 타당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이미 설정된 지역노동시장권역을 적용하였다.

- 2) 일자리 창출이 지역성장 및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적으로 Almon(1965)의 Polynomial Lag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창업이 지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므로, 향후 이 모델을 적용한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시점에 통일된 기준으로 실시하는 5년 주기의 대규모 전수조사로서 2011년에 최초로 조사하였으며, 이 결과는 2013년부터 활용가능하다.

### 참고문헌

김대중·경중수·정성훈, 2014, “산업구조 다양성과 고용 창출 및 지역경쟁력간 관계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4), pp.786-800.

김원규, 2012, “신설법인 기준 창업률과 성장 및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 분석”, 산업경제 3, pp.49-57.

남춘호, 2011, “고용의 질 지수를 이용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추세 분석”, 경제와 사회 92, pp.305-350.

노용환·신종각, 2007,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고용의 질 추이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0(3), pp.45-65.

문남철, 2008, “지역 간 창업 격차 및 특성”, 국토지리학회지 42(2), pp.255-267.

문남철, 2009,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지역 간 격차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3(3), pp.423-433.

박시내, 2009, “지역별고용조사에 의한 권역설정 연구”, 통계의 창 제5호, pp.80-107.

방하남·이상호, 2006,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한국사회학 40(1), pp.93-126.

변필성·김광익·김태환, 2005, “지역경쟁력과 경제발전 간의 관계: 변이할당분석기법의 고용성장예의 적용을 토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2), pp.267-284.

송영남, 2010, “‘좋은 일자리’의 결정요인과 지역 간 분포의 변화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24(4), pp.209-234.

양현봉·조덕희·박종복, 2009, 창업기업의 행태 및 성과 분석: 경영성과 및 고용창출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 산업연구원.

윤갑식, 201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업종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4), pp.616-627.

윤윤규·고영우, 2009,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상호, 2008, “지역노동시장권(LLMAs)의 측정과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8(4), pp.147-182.

이성균, 2008, “중장년층의 취업과 괜찮은 일자리”, 한국사회정책 15(2), pp.181-216.

이운재, 2005,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가?” 산업경제연구 18(2), pp.653-671.

이종호·김진수, 2012, “산업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4), pp. 570-584.

최옥금, 2006,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 정의 및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2), pp.227-252.

한국노동연구원, 2012,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0 -방법론, 설정 및 평가-,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완, 2007, “지역 간 일자리창출 특성 및 격차 분석”, 도시행정학보 20(3), pp.77-97.

Acs, Z. and Mueller, P., 2008, “Employment Effects of Business Dynamics: Mice, Gazelles and Elephants”, *Small Business Economics* 30(1), pp.85-100.

Almon, S., 1965, “The Distributed Lag between Capital Appropriations and Net Expenditures,” *Econometrica* 33, pp.178-196.

Andersson, M. and Noseleit, F., 2011, “Start-ups and Employment Growth—Evidence from Swe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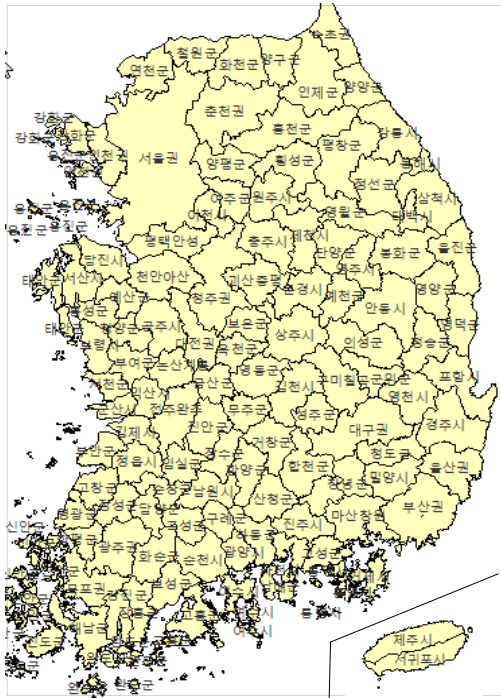
- Small Business Economics* 36(4), pp.461-483.
- Anker, R., Chernyshev, I., Egger, P., Mehran, F. and Ritter J., 2003,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International Labor Review* 142(2), pp.147-177.
- Arauzo Carod, J. M, Liviano Solis, D. and Martin Bofarull, M., 2008, New Business Formation and Employment Growth: Some Evidence for the Spanish Manufacturing Industry. *Small Business Economics* 30(1), pp.73-84.
- Audretsch, D. and Fritsch, M., 2002, "Growth Regimes Over Time and Space", *Regional Studies* 36, pp.113-124.
- Baptista, R, Escária, V, Madruga, P., 2008, "Entrepreneurship, Regional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The Case of Portugal", *Small Business Economics*, 30(1), pp.49-58.
- Baptista, Rui and Miguel T. Preto, 2011, "New Firm Formation and Employment Growth. Regional and Business Dynamics", *Small Business Economics* 36(4). pp.419-442.
- Bonnet, F., Figueiredo, J., and Standing, G., 2003, "A Family of Decent Work Index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2), pp.213-238.
- Bosma, N., Stam, E. and Schutjens, V., 2011, "Creative Destruction and Regional Productivity Growth: Evidence from the Dutch Manufacturing and Services Industries", *Small Business Economics* 36(4). pp.401-418.
- Casado-Diaz, J., 2000, "Local Labour Market Areas in Spain: a Case Study", *Regional Studies* 34(9), pp.843-855.
- Carree, M. and Thurik, A., 2006, "The Lag Structure of the Impact of Business Ownership on Economic Performance in OECD Countries", *Small Business Economics* 30(1). pp.101-110.
- Coombes, M., and Bond, S., 2008, Travel- to-Work Areas: the 2007 Review, Londo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Dejardin, M., 2011, "Linking Net Entry to Regional Economic Growth", *Small Business Economics* 36(4). pp.443-460.
- Dejardin, M. and Fritsch, M., 2011, "Entrepreneurial Dynamics and Regional Growth", *Small Business Economics* 36(4). pp.377-382.
- Fritsch, M., 2008, "How Does New Business Formation Affect Regional Development?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Small Business Economics*, 30(1), pp.1-14.
- Fritsch, M., 2014, Entrepreneurship and Employment, Paper presented at 3<sup>rd</sup> Summer School on "Knowledge Dynamics, Industry Evolu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Nice, France, July, 11, 2014.
- Fritsch, M. and Mueller, P., 2004, "Effects of New Business Form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over Time", *Regional Studies* 38(8), pp.961-975.
- Fritsch, M. and Mueller, P., 2008, "Effects of New Business Form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over Time: The Case of Germany", *Small Business Economy* 30(1), pp.15-29.
- Fritsch, M. and Schroeter A., 2011, "Why Does the Effect of New Business Formation Differ across Regions?", *Small Business Economics*. 36(4), pp.383-400.
- ILO, 1999, Decent Work: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7th Session.
- Mueller, P., van Stel, A. and Storey, D., 2008, "The Effects of New Firm Form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Over Time: The Case of Great Britain", *Small Business Economics* 30(1), pp.59-71.
- Reynolds, P., 1994, "Autonomous Firm Dynamics and Economic Growth in the United States, 1986-90", *Regional Studies* 27, pp.429-442.
- Schindele, Yvonne and Antje Weyh., 2011, "The Direct Employment Effects of New Businesses in Germany Revisited—An Empirical Investigation for 1976-2004", *Small Business Economics* 36(4). pp.353-363.
- Schumpeter, J.,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Harper and Row, New York.

- Smart, M., 1974, "Labour Market Areas: Uses and Definition", *Progress in Planning* 2, pp.239-353.
- van Stel, A., Carree, M. and Thurik, R., 2005,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Activity on National Economic Growth", *Small Business Economics*, 24, pp.311-321.
- van Stel, A. and Storey, D., 2004, "The Link between Firm Births and Job Creation: Is There a Upas Tree Effect?", *Regional Studies* 38, pp.893-909.
- van Stel, A. and Suddle. Kashifa., 2008, "The Impact of New Firm Form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in the Netherlands", *Small Business Economics*, 30(1), pp.31-47.

교신: 이희연,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메일: leehyn@snu.ac.kr

Correspondence: Lee Hee Yeon,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ngn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E-mail: leehyn@snu.ac.kr

최초투고일 2015년 5월 2일  
수정일 2015년 5월 27일  
최종접수일 2015년 5월 29일



〈부록 1〉 121개 지역노동시장권역

〈부록 2〉 산업별 임금(정액/일수) 및 임금 구분

산업분류별	일당 평균 임금(원)	구분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57,559	고임금
K. 금융 및 보험업	150,982	고임금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1,286	고임금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0,727	고임금
P. 교육서비스업	131,661	고임금
A. 농업, 임업 및 어업	108,894	중임금
F. 건설업	106,496	중임금
B. 광업	102,977	중임금
G. 도매 및 소매업	101,296	중임금
E. 하수·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90,428	중임금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90,135	중임금
C. 제조업	88,406	중임금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8,068	중임금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7,650	중임금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85,740	중임금
H. 운수업	85,465	중임금
S. 협회, 단체, 수리, 기타개인서비스업	82,255	중임금
I. 숙박 및 음식점업	66,382	저임금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9~12년 평균)

〈부록 3〉 산업별 인당 부가가치 금액 및 구분

산업분류	인당 부가가치 (만원)	구분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3,552	고부가
K. 금융 및 보험업	23,401	고부가
C. 제조업	12,523	고부가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2,379	고부가
B. 광업	9,782	중부가
R.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9,601	중부가
G. 도매 및 소매업	9,202	중부가
A. 농업, 임업 및 어업	8,945	중부가
H. 운수업	8,216	중부가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086	중부가
E.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7,351	중부가
F. 건설업	7,247	중부가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5,993	중부가
S.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5,101	중부가
P. 교육 서비스업	4,789	저부가
I. 숙박 및 음식점업	3,874	저부가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2,584	저부가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62	저부가

출처: 통계청, 기업활동조사(2007~12년 평균)